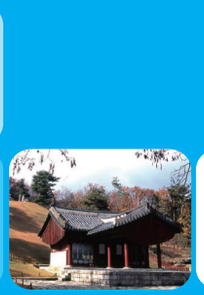
www.krila.re.kr

지방자치실천포럼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8





August 2013 | vol.4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자치실천포럼 중계

–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

– 포럼위원 토론 요약

특별대담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이슈대담 :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달의 Issue

–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행정의 역할

–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쟁점과 과제

–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지역공동체 활성화



8 August 2013 **Vol. 4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49호
발행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편집인 / 지방자치실천포럼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4 ●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방자치실천포럼」 소식
– 기조연설 :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
– 포럼위원 토론 요약

14 ● **특별대담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21 ● **이슈대담 : 김영배 성북구청장**

27 ● **논단**
–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행정의 역할
–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쟁점과 과제

● **해외우수사례** 36
–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 **지방자치단체 탐방** 42
– 빌딩 숲 사이 우리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곳, 성북구

● **연구원 동정** 4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방자치실천포럼」 소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은 지난 6월 26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창립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박재창 교수, 이승종 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지방자치 관련 학계, 언론, 시민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50인 내외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포럼 목적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
-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관-학-연간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 포럼 구성
- 공동 대표 :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이승종(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위원 : 학계 박광국 교수 외 9명, 안전행정부 정재근 실장 외 7명, 지방자치단체 염태영 시장 외 10명, 언론 및 시민단체 신현태 연합뉴스 전무 외 7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명

■ 포럼 기조연설자들
- 창립총회: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 (2013.6.26.)
- 제2회 포럼: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2013.7.31.)





〈기조연설〉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1. 기본 방향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는 크게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의 3대 추진목표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그리고 성숙한 자치로,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는 정부 3.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성숙한 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으로 아직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라 발표할 수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확실히 주되, 자기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다. 안행부에서는 그동안 행정기관, 자치단체, 그리고 의원 등의 개인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나아가고자 하고, 중앙자치라는 이분법적 자치에서 상호 공동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2. 지방분권 방향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안행부에서는 해마다 실시하는 사무총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zero-base에서 법령을 검토하여 사무분권체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100만 이상의 도시에 소방사무, 농지전용 등 8개 사무특례와 부시장 2명 등 2개 조직특례를 부여하였다. 소방사무는 창원시에서 시범실시 중이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과 같은 도시에서 추가적으로 사무특례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자치경찰체 도입, 교육-일반자치 연계 · 통합방안 등의 핵심 지방분권과제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차지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자기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의정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가하는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여건이 자율성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읍면동 행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자치라는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개별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집행에 주민참여를 통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라는 기존의 목적이 약화되고, 그 경계가 모호해져, 안행부에서는 사무관과 신임 서기관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앙에서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도 가지고 있다.

3. 지방재정의 정책 방향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산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를 5%에서 10%로 확대하려는 방법이 추진 중이다. 또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압류, 독촉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진납부 이행강제수단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를 통해 지방수입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재의 지방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자치 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정도 등에 따라 수입 산정을 차등화 하여,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구조를 조정하려고 한다. 넷째, 지방재정은 그동안 안행부의 직접적 통제가 많았는데, 단체 간의 비교를 통해 주민들이 내용을 보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하고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통계에는 자치단체, 지방교육, 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의 재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그동안 대규모 사업은 중앙(안행부)에서 심사하였는데, 전문성의 부재 등과 같은 비판이 많이 있어왔다. 이에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 받도록 하는 자치단체 투자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잘 되어있지 않았던 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은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자기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며, 지방분권의 문제와 같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다.



〈토론내용〉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모델링을 해서 시범실시한 후 지역의 다양한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의 구성에서부터 어떠한 것이 다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의식을 긴 안목으로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 새 정부의 분권전략이 정권마다 반복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목만 다르지 내용상 다를 게 없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분권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되며, 이제는 안행부만 가지고 지방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안행부, 다양한 연구소들이 함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 차원에서는 외국의 경우 규모가 작아 주민 참여도 쉽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이지만, 한국은 다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염태영 수원시장 : 최근 들어 자치단체 투자심사를 강화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할 때, 국비와 국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옥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자체책임성을 논하기가 어렵다. 투자의 절차와 방식을 지자체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고 생각된다. 이 포럼에 다양한 지자체 단체장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다른 분들의 열렬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승종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소진광 가천대 교수 : 적절한 주민 자치와 지방 분권들에 대한 논의가 사회경제적인 배경에서 볼 때 너무나 이상적인 주장만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동시에 이러한 논의들이 선진국 기준에 맞춰서만 이야기되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국민이 아닌 주민으로서의 생활패턴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앞에서 한 논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필용 음성군수 : 음성군의 기업체 2천개 중 식품업체가 4백개 정도인데, 그 이유는 국가사업이었던 식품 지도 단속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은 이양이 되지 않고 권한만 이양되었다. 그 결과로 실제적으로 식품업체를 감시하는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가사업에 대한 권한을 이양할 때에는 인력과 예산도 같이 이양되었으면 함.



박광국 한국행정학회장 : 실제 박근혜정부에서 약한 부분이 지방분권과 자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 예로 아직도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를 만들려는 작업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주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권한을 모두 빼앗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단지 몇몇 지자체의 잘못된 운영만 보고 전체 지자체를 불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황명선 논산시장 : 분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볼 때에 지방분권에 대한 이슈에서는 재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분권이 자치이자 자율성인데,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실질적으로 재정에 대한

문제가 이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방분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포럼에서 기획재정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할 때, 자체적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방안을 내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의 남발, 인사권과 조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한 불신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에 관한 국정과제의 대표적인 문제가 자주재정 강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확충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앙에 대한 의존 축소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 특히,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고보조금을 정비할 때 주의할 점은, 기재부나 지자체, 그리고 안행부 모두의 관점에서 국고보조금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 편향적인 시각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개편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성웅 광양시장 : 광양시의 재정자립도 40%정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4개의 정부를 지내보면서 그동안 운영자원 확보를 위해 기재부나 예산처 등 예산 관련 부처에 의지를 많이 해야 했다. 지방재정이나 지방분권 문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준금 울산대학교 교수 : 주민 참여나 주민 자치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실행되기는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주민들로 각자 나름대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나 감시 등의 행동에 시간을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



행부에 맡기기 보다는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실행해야 하며, 현재 주민 참여가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알아보고 그들을 더욱 장려한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 :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동안의 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들이 구태의연하고 반복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들이 바로 정석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부를 견제할 만한 tool이 존재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체계가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앞으로는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용철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 : 재정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재원이 중앙과 지방이 나눠쓴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된다.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확충한 재원을 지방정부가 끌어다가 쓰는 것이 중심이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가지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첫째, 중앙재정으로부터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무를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보장이 어려운 사무의 경우에는 재원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이 지역 재원 확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역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세출과 세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일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지자체와 중앙 간에 갈등 해결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로 간의 분쟁에 관한 법규정을 제정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도와줄 수 있

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기우 교수 : 안행부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지방세를 취득세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재정에서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자치 사무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고 위임사무는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결정은 중앙에서 하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임광원 울진군수 :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무를 지방에서 하느냐 중앙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을 할 것인지 중앙에서 직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결정은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 구분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양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된다.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대통령이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해 너무 언급이 적다보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정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대표) : 박근혜 정부가 지방분권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연석회의와 지방자주재정권 등 분권과제가 포함된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언급의 빈도가 잦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잦은 언급과 지방자치실천포럼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항목들이 더욱 빠르게 시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러므로 포럼에 참석해주시는 위원들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를 바란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대표) : 아직까지 지방분권과 재정에 관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적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국가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분권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다른 핵심적 과제에 밀려 실천적 전략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 지방분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허구적인 기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도의 발상 자체에 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정부 3.0에서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zero-base에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정리 한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관)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지역발전위원장

- **일시 및 장소** / 2013.8.7.(수) 15:00 지역발전위원장실
- **인터뷰 대상**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인터뷰 진행** /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이승종 원장 :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지역발전과 국민행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번에 지역발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으셨는데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종 위원장 : 먼저 지역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발전위원회는 아시는 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 · 심의 · 의결하고 있으며, 정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지난 6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통해 나라 전체의 국부와 국제적인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일궈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지역 간 생활의 격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큰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일궈내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의 지역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를 좁히는 등 지역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낙후지역처럼 성장에서 소외된 지역에 활력이 넘치게 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 든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렇게 전국 각 지역을 위해 일할 때 이원회의 존재가치도 커지고 더 나아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소임도 탄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승종 원장 : 위원장님은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생활행복권'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원종 위원장 :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이 도시 · 농촌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기초인프라와 일자리 그리고 교육 · 문화 · 복지 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는 일상의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그간 국내에서 학계를 중심을 논의되어 온 개념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을 넘어서 매일같이 국민들이 오가는 통근 · 통학 등을 비롯하여 실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요체는 국민의 행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SOC 사업이나 광역경제권 정책은 국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한 측면은 있지만,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끼리 서로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연대를 통해서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 실제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 취지이지요.
예를 들면, 생활밀착형 인프라로서 상수도나 가스와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정책에 있어 지역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창출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도시와 농촌 어디나 똑같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권역을 설정해 정책을 하향식으로 이끌어 나갔지만, 이제는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발전정책을 상향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유사한 지역사업들을 하나로 합쳐서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해 지역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이승종 원장 :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하여 이미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 한 두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원종 위원장 : 지역발전위원회가 대통령께 보고 드린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하에 6대 중점추진방향과 17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6대 분야의 추진방향은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복지 및 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입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17개 세부추진과제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투자를 촉진하며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달동네 등 도시와 농촌 중심지에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가스와 같은 난방비 절감,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으로 주민행복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을 대표과제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종 원장 :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체단체 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계협력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종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지역 간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막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를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고 33개 과제에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3년 추진 사업(예시)〉

- 의료사업과 농산업·관광 연계 : K-FARM 누리사업 등(대전, 영동, 공주, 예산)
- '길' 테마 관광 활성화 : 장돌뱅이루투 연계사업 등(영원, 평창, 제천)
- 공동체 활성화 : 메이플스톤 공동체 보육센터 조성 등(정읍, 고창)
- 기피 시설을 공동 추진 :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해남, 완도, 진도)

첫 번째 성과는 지역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간 협력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청권 경제포럼('11.6), 동남권 100년 포럼('11.7)이 창립되고, 수도권은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 공동사용협약('11.12)을 체결하는 등 광역적인 협력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군(물축제)과 강진군(청자축제)은 같은 시기에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있고,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과 경남 4개 시군(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남중권 9개 시군은 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11.5)하고 비용을 각출하여 '12년부터 공동홈페이지 구축, 팸투어 공동추진 등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초보적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가동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간 행정구역 위주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을 발굴·추진을 위해 실무진 TF팀 구성부터, 자치단체장 간 상호양해각서(MOU)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시스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역내 주체들의 사업 발굴 · 기획 능력이 점차 신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은 공모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중앙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 · 기획 ·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연계협력사업의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승종 원장 : 최근 들어 주민체감형 지역발전, 지역공동체 복원 등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종 위원장 :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도 세종시, 혁신도시 등과 같은 분산형 균형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정책의 성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미약했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과거 절대적이었던 경제성장 우선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주민행복을 위해 절실한 과제를 찾아 섬세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 문화 · 교육 ·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전국 이디에서 살아도 기초생활서비스(National Minimum)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에 올라오지 않아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과 의료 · 복지서비스를 받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결집된 주민역량으로서 지역공동체가 자립기반을 갖추고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종 원장 : 위원장님은 충청북도에서 두 번이나 지사를 역임하셨고, 과거에는 서울시 여러 자치구청장도 역임하셔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현안과 어려움을 두루 알고 계십니다. 지방분권 추세에 발맞추어 성공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추진체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종 위원장 :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도 20살이 넘으면 성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관행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정책과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다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그에 맞춰 따라오는 형국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개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따져, 내야 될 목소리는 주저없이 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예전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주민의 생활반경이 넓어지다 보니 이제는 어느 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주민수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르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지역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 ·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더욱 여실히 드러나지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자리와 교육 · 문화 · 복지 · 환경 등의 공공서비스 그리고 쇼핑 등 상업서비스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3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해 기초서비스부터 고차서비스까지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가고,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정부 주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스스로 기획 · 선정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민과 지방정부 수요를 수렴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수행과정에서 부처간 · 지역간 협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이승종 원장 :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 조직

진단 및 컨설팅,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 도서·접경지역 등 낙후지역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원종 위원장 : 내년이면 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많이 성장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우뚝 섰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30주년을 사람나이로 생각하면, 성장하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기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대에 부응해 지방행정연구원이 21세기 선진형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도 몰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들을(what), 어떻게(how)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자치, 분권 등 제도적인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분에도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양극화 실태 조사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제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 위원회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우리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그 대상이 '지역'이며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처 간, 그리고 공공기관 간 협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국책연구원으로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든든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으며 지방행정연구원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정리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을 만들기 1번지 사람·희망 성북구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

이소영 연구위원 : 지난 3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김영배 구청장 : 민선5기 성북구는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성북형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도서관 확충 사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구민이 3년 동안 '참 좋은 정책' 1위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85%에 달했으며,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주민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업이라면 도서관 건립사업은 주민이 가장 만족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 시설을 갖추고 방대한 양의 도서를 구비했다 해도 멀리 있는 국립도서관 보다는 집 가까이에 있어 늘,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5기 시작 당시 성북구에는 구립 도서관이 3개소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개로 서울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남9, 성북8, 서초7) 구립도서관을 포함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골목골목의 작은 도서관들은 지식문화의 거

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 불안까지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성북형 방과후 돌봄체계 역시 주민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분절적으로 추진해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학부모의 혼선 등을 지적받아왔습니다. 성북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립 방과후돌봄센터 3개소를 건립하고 관내 80여개 시설에 걸쳐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 아동, 일반아동까지 포함하는 공평한 돌봄 기회를 제공하는 지방정부 중심의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성북구가 시도하고 국가적 아젠다로 확장된 이 사업들은 모두 주민의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한, 사람중심이라는 가치가 정책으로 구체화된 성과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우리 구는 '2013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참여와 협동의 인권도시, 성북'으로 공감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0년 선거공약부문 대상, 2011년 일자리공약 분야 우수상, 2012년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에 이은 4년 연속 수상이며 이는 전국 최초이기에 그 보람이 남다릅니다.

이소영 연구위원 : 구청 홈페이지의 '사람 · 희망 성북'이라는 슬로건이 눈에 띕니다. 구정 비전이 담긴 듯한데, 민선5기 성북구의 핵심비전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김영배 구청장 : 민선5기 성북구의 핵심비전은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동체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두 사람이 중심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패러다임도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하였습니다.
핵심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성북구의 전략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도시입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며, 이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축,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개소, 방과후 돌봄센터 3개소 개소, 공공도서관 8개소 확충, 인권도시 성북 추진은 모두 인정과 정서의 배려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을 두고 추진한 결과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는, 주민의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하는 것입니다. 각종 아카데미 운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개소와 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기반마련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도시는, 구정의 주인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8대 열린토론회 실시, 7대 전략과제 구축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연구위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공동체복원과 주민참여의 마을만들기에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모범 지자체로서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 추진 성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김영배 구청장 : 우리 구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리더 육성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아카데미, 통장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한옥아카데미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 마을활동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는 2013년 7월 현재 1,400명이 넘습니다. 숫자상으로도 적지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인적 기반이 구축되고 자연스럽게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과 공유하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2011년 12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민간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4명의 직원이 주민교육사업, 공모사업, 관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27개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는 정기 · 수시 · 지정 공모 등 분야를 다양화하여 3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공모사업은 마을주민이 자기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의 사업계획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는 면에서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는 사업비와 사업진행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 · 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사업의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력과 성과가 알려져 국내외의 많은 분들이 '마을'하면 성북을 떠올리고 지금은 성북구의 공동체 재생사례를 배우기 위해 국내외 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 대만, 홍콩, 독일 등 해외를 포함한

총 58개 단체 780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사업경험과 자료가 대한민국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확산과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재생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서 및 공동체 복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을의 지역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주민이 직접 주도해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동네목수, 살기 좋은 마을, 키득키득 맘키드 등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할 것이라는 상상으로 시작해 성북구를 대표하는 마을기업이 되었습니다. 효율성을 앞세워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라 각각의 필요에 맞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는 것이며 이 정신은 마을공동체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동 단위에서 민관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기기 위한 일종의 공동지성 거버넌스, 즉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성북구는 2011년 서울시 최초로 관내 20개동 모든 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전까지 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있었지만 동 단위 협의체 조직 구성은 우리 성북구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를 하던 시장상인, 학원장, 병원장, 음식점주 등이 복지협의체를 통해 조직화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발굴해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에만 해도 4,773건을 지원하고 473건의 서비스 연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돌봄, 복지, 청소,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elihood)에 맞춘 복지! 성북은 오늘도 주민의 개개인의 삶을 인정하고 살피며, 굶는 사람이 없는, 자살이 없는, 고독이 없으며 새로운 가족의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 '3無2有'가 구현되는 복지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소영 연구위원 : 성북구의 마을만들기 경험은 구청장님 재임기간 이전부터 쌓아 온 것입니까? 지금의 마을만들기로 발전해오기까지 지역적 토대가 축적되어 왔다고 판단되는데, 성북구의 어떤 특성이 현재와 같은 성공을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김영배 구청장 : 성북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로 인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역사성이 사라지고 원래 살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자, 민선5기 구정의 핵심사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내재되었던 마을공동체 회복의 욕구와 행정적인 지원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선동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마을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안개발연구모임이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구에서도 지원을 시작하여 현재 마을 전체에 대한 대단위 사업이 진행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소영 연구위원 :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사례 중 가장 의미 있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김영배 구청장 : 삼선동 장수마을 사례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수마을은 매스컴에도 여러 번 소개된 바 있습니다. 장수마을은 한양도성 성곽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매우 심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서울의 달동네입니다. 2004년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마을 주민이 재개발이 되기만을 기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양도성과 삼군부총무당 등 문화재가 인접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데다가 마을의 노후화가 가속화되자 마을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대안개발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마을기업 '동네목수'가 생겼습니다. 동네목수는 긴급한 집수리, 골목길 계단 정비 등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실행활에 필요한 집수리 · 목공교실, 골목디자인 교실 등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장수마을소식지 발행, 벼룩시장, 마을잔치 등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마을학교 운영공간과 동네목수의 공방장소를 제공하는 등 공동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장수마을에 관심을 갖게 된 서울시가 2012년 2월에 장수마을을 '서울시 마을만들기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장수마을 역사문화보존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도시가스 보급, 하수관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사박물관, 마을사랑방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 개별집

수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 장수마을을 정든 이웃과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터로 탈바꿈시키는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6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수마을은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사업 노력과 공공의 지원이 합쳐지면서 마을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주는 본보기이며, 또한 마을기업 동네목수를 통한 마을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재생과 사회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의 모범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소영 연구위원 : 마을만들기를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타 지자체를 위해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배 구청장 : 공동체 회복은 결국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관주도가 아닌 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역량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주민참여가 없다면 기존의 사업들과 변별점 역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의 교육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주민의 개별적 역량 강화는 물론 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가치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의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초기에 관의 지원은 중요한 발전요소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의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주민의사에 반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잉지원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성북구는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여론조사와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사파악을 위한 노력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사업을 무의미하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개발위주, 성장위주의 정책 속에서 많은 폐해를 경험한 주민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복원과 재생을 희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공동체사업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행정의 역할



구자인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설 연구소장)

최근 들어 마을과 공동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큰 유행어처럼 번져가고 있다.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축 성장을 해온 나라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20여년 전부터 마을만들기라 부르는 활동을 서울에서 처음 시작하여, 이제는 농촌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럼에도..'라는 단서를 계속 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의 정책 흐름은 너무 빠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 정책에도 관여하고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안군의 경험을 기초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역사와 구조를 잘 인식하자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려는 활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해온 역사가 있고, 그런 경험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새로운 실천을 조직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역사와 구조를 알면 알수록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된다. 조금 비약이 포함되지만 단순요약하자면, 20세기 한국 역사는 풀뿌리 지역공동체성의 파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독립운동 근거지라는 이유로, 한국전쟁 시

기를 전후로 한 시기에는 좌우익 대립으로, 또 해방 이후 긴 독재시기에는 민주화(농민) 운동 탄압으로…. 그 결과로 마을의 전통적인 주민조직은 풀뿌리까지 해체당하고, "나서면 다친다", "열심히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또 하향식, 하드웨어 중심의 근대화과정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또 급속한 이농향도(離農向都) 정책으로 국토공간체계는 도시 중심으로 재편되고, 농촌이나 도시나 풀뿌리 마을의 안정성은 무너졌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도 지향점이나 방법론 측면에서 국가주도 근대화 정책의 일환에 그치고 마을 기반의 주민 주체 형성과 마을 시스템 구축에는 실패하였다. 또 정부 주도의 지역계획은 개별 공간이 가진 고유성을 해체하고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주민 삶과 유리된 공간으로 끊임없이 재편하여 왔다. 성장거점 전략과 양적 지표 평가는 문화와 환경, 복지와 같은 공간의 질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뒤늦게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지만 정책적으로는 주민자치 측면보다 단체자치에 집중되었고 성장위주와 행정주도 경향은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런 역사성을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들여다보면 '20세기 1백년간 축적된 모순'을 뒤집는 움직임이 바로 마을만들기이고, 지역공동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무게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역사회의 인재를 계속 빼가고 서로 협력하는 구조가 파괴된 상태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의 역사와 구조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는 새로운 전환이 있기 힘들다. 국가가 주도하고, 시장경제에 종속시키는 정책의 결과로 파괴된 것인 바로 지역공동체였던 셈이다. 치열한 반성 없이 시작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 설득력도 생기게 된다.

행정은 적어도 이런 점에 유의하여 정책을 도입하자

최근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한다. 국토부나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등도 유사한 사업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은 매우 환영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이런 정책 사업을 실제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신규 정책의 위험성도 크게 감지된다. 이 기회를 빌려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강조해두고 싶다.

첫째, 행정의 고유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이 너무 나서면 절대 안된다. 행정 주도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민간 영역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개입해야 한다. 특히 행정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간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 적어도 행정 부서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한다. 또 행정은 고유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간의 시행착오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조급한 성과주의를 탈피하여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드웨어 사업을 줄이고 사람과 조직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관점과 자세가 중앙에서 시작하여 광역, 기초 자치단체 수준으로, 그리고 읍면동 단위까지 파급되어야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행정의 지원 시스템이 정비되는 셈이다.



둘째, 행정은 마을 자체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야 한다. 마을에서 출발하는 공동체 복원의 노력은 아주 중요하지만 마을 위원장과 같이 몇몇 사람의 희생과 봉사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행정이 마을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다. '무보수 명예직' 위원장에게 공공사업을 강요해온 관행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시스템의 정비가 훨씬 중요하다. '마을이 지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이것이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성과라고 자랑한다. 특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이 지역사회에 안정성과 전문성, 지속성을 갖춘 민간조직을 갖추고 '마을형'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중앙 행정은 이런 관점에서 자치단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유도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들이 풀뿌리 횡적 연대망을 복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행정의 '칸막이'로 인해 민간단체들까지 '줄세우기' 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중앙으로 갈수록 전문성이 중요하기에 분화될 필요가 있지만, 반대로 읍면동 단위의 작은 지역사회일수록 횡적 연대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같은 풀뿌리 조직이 민간 주도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 조직의 연대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서로의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자주 만나 학습하고 토론하며 연대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풀뿌리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그 자체가 공동체의 복원이기도 하다. 지연과 학연, 혈연으로 얽힌

마을 내부에서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이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시스템 정비 차원에서라도 이런 민간단체의 횡적 연대망 구축을 의도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상식과 원칙에 더욱 충실하자

마을만들기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성과가 지역에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시행착오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이다. 마을과 주민의 의식이 바뀌는 속도는 너무 더딘 반면 행정과 정치가 먼저 질주하는 형국이다. 과연 "누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조차 해보지 않은 어설픈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행정은 사업 자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와 구조를 읽는 눈'을 먼저 키워야 한다. 지역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만 남발되면 '제도적 피로'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마을만들기의 기본 지향점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강화, 주민 학습능력의 배양, 지역자립경제의 구축, 상부상조의 공동체문화 복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방법론으로 최선보다 차선에 합의하는 것, 상호학습을 통한 신뢰 구축, 결과보다 과정의 중시 등과 같이 주민참가를 촉진하고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다. 우리가 지역공동체를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의 봉건적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그림에서나 보는 농촌 마을의 목가적, 낭만적 공동체를 이상으로 할 수는 없다. 21세기의 새로운 지역공동체는 외부로 열린 공동체이며, 대등한 인간관계, 자치적 지역관리 등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나 지역공동체 복원 등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 및 실증사례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식민지와 분단, 독재, 압축적 도시화를 경험한 한국 상황에서 지역이 처한 조건과 극복 전략은 서구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핵가족화의 시대 경향 속에서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정말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인류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인문학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고, 학술적 논쟁도 깊어지면서 활동과 사업의 진화도 가능하다. 성찰이 없고 활동만 많아서는 쉽게 지치고 진전이 없다.

둘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에 밀착하여 주민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지역사회에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한 결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 관행은 빨리 바뀌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인재가 양성되고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내에 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의 길을 더욱 개방하고 적극 장려해야 한다. 또 진안군의 마을간사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례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고,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향 돌아가기'와 같은 중앙 차원의 캠페인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속된 말로 "사람이 일을 한다".

셋째, 지역 민주주의의 문화적 풍토 만들기와 병행해야 한다. 지역에서 학습동아리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책 토론회도 수시로 열려야 한다. 진안군에서 시도했던 학습동아리 육성사업과 지역연구 논문 공모사업,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지원 사업, 주민참가형 연구용역 등은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 지역의 '토박이'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 문제란 것도 성숙되지 못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말할 줄 아는 문화적 풍토가 지역공동체 복원의 출발이자 그 자체가 지역공동체인 셈이다.



현재의 지역 상황에서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된 지역사회로 발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중장기적 과제이고 결코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특히 내부주체의 역량이 극히 미약하고, 토론과 합의의 문화적 풍토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의 정책 사업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현재의 지방자치 선거 결과는 이런 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지역공동체를 복원한다는 것은 풀뿌리 마을 현장에 더욱 밀착하면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길이다.

〈참고자료〉

구자인 외, 2011.12, 「마을만들기, 진안군의 10년 경험과 시스템」, 국토연구원,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쟁점과 과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공동체센터 소장)



1. 무엇이 중간지원조직인가?

최근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이다. 마을공동체라고도 하며, 마을만들기라고도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다. 지역공동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차라리 마을공동체나 마을만들기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는 용어의 사용에서부터 중앙부처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사업들이 많아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의 논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 지역의 역량에 버거울 정도로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의 논의 등이 이들에 해당된다.

또 하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논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이 부처별로 양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를 포함해서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부터 과연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가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중간지원조직은 원론적으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생과 협동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일본 내각부). 하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공동체 사이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앙부처나 지자체와 지역공동체 사이에서 행정과의 거버넌스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인력양성,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전문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하향식)와 민간주도(상향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통역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특징

중간지원조직의 쟁점은 우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단초는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데 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역의 고용센터가 주체가 되어 시도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경기의 협성대, 강원의 한림대, 경남의 경상대 등 9개 시도의 대학을 지정하여 광역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안행부의 마을기업도 시도가 중심이 되어 17개의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 부산, 전북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2005년 광주시 북구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필두로 수원, 안산, 강릉, 진안, 완주, 정읍, 성북구(서울), 금천구(서울) 등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2013년 현재 17여개의 마을만들기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며, 향후 인천, 전남 순천, 경기 안양 및 부천 등의 지자체가 마을만들기 지원조직을 설립할 예정에 있다.

〈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의 설립현황 〉

구 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설 립	– 농식품부 : 광역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 – 고용노동부 : 시도별 지역고용센터 17개 – 안행부 : 시도별 마을기업지원센터 17개	
지자체 설 립	– 서울(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부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전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 경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원, 강릉, 광주남구, 광주북구, 안산, 서울성북, 서울금천, 완주, 진안, 정읍, *예정: 순천, 안양, 부천, 광주북구 문화동 등
계	47개	15개(설립예정 포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47개 정도의 부처별로 또는 광역 지자체 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고 있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15개에 이르는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고 있다. 이들은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마을기업,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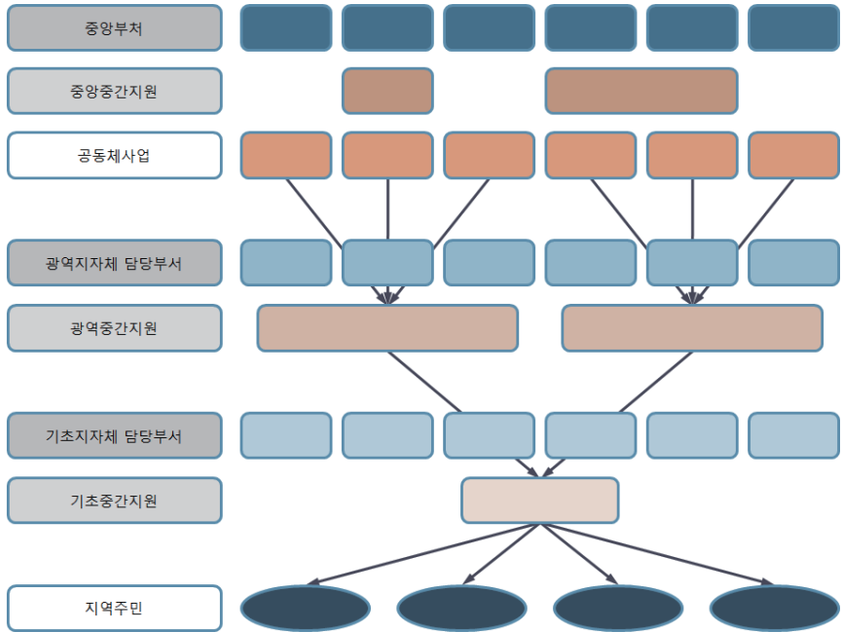
중앙부처가 설립하는 중간지원조직은 별도로 하고, 지자체가 설립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초기에 설립하는 경우와 마을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추진되어 성과가 창출된 다음에 추진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서울, 수원, 안산, 광주 북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며, 후자의 경우는 진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진안은 거의 10여년 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다음 2013년에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완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핵심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한 다음, 일반의 마을공동체까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차별성이 있기도 하다.

3. 중간지원조직의 과제

그런데 과연 부처별로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보육, 환경생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간의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적으로 단기적으로 운영해서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한 다음, 장기적으로는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중앙부처가 협력해서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발전을 지원하는 일본의 '지역활성화통합추진본부'를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될 경우 다수의 부처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다수 부서를 상대로 할 필요가 없이 중간지원조직이 중간에서 사업을 '깔때기' 식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지역공동체가 '통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담당자 사이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지역공동체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고 역량을 함양시키는데 무게중심을 두어야지, 행정기관화가 되는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이 자체가 또 하나의 행정기관이

〈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본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달체계 〉



자료 : 임경수(2013) 수정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행정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기초단위의 현장 리더나 활동가를 중간지원조직으로 데려가는 문제도 경계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현장 활동가나 리더의 육성을 통해 자생적이고 지속성을 지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다고 볼 때, 지원을 빌미로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존재의 기한에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공동체 역량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한 접근이 타당하다. 다만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상당히 성숙되고, 그러한 지역공동체가 전국적으로 증가되어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사회적 가치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먼 미래에는 중간조직의 필요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지역공동체가 충분히 내부화될 수 있을 정도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증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95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이타이 이타이병'과 같은 공해문제가 심각해져갔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도시환경문제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과소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를 저항하는 시민운동을 촉발시키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고베시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 주민들과 '니시야마 우조우'라는 연구그룹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거리 만들기'를 실천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즉 마치즈쿠리[1]의 표본적 사례가 되었다.

1970년대부터 '마치즈쿠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본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점차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 만들기를 비롯하여, 지구차원의 도시정비와 재개발사업 등 제도화된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도쿄 세타가야구의 '방재마을 만들기', '건축협정', '가로건축물 헌장'이나 오이타현의 '일촌일품운동' 등 일본의 마츠지쿠리는 행정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형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마을만들기과, 마을 만들기 센터, 마을 만들기 조례 및 마을만들기 펀드 등 마치즈쿠리 지원제도와 조직을 잘 정비하여 선진사례로 꼽히고 있는 도쿄도(東京都) 세타가야구(世田谷區)의 마을 만들기를 관련 제도 및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2]

1) 마치즈쿠리는 '마을'이라는 명사형과 '만들기'라는 명사형 동사가 결합된 복합어를 말한다.
2) 이하의 내용은 정석(1999), 천현숙(2000), 김선기 · 이소영(2007), 그리고 목정훈 · 박종현(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및 과정

세타가야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방재를 목적으로 지역현황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었다. 그 결과 도로나 기반시설은 많이 정비되었으나 주거환경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197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권이 도에서 구로 대폭적으로 위임되면서 세타가야구는 주민에게 친근한 지자체로써 '구'의 독자적인 마을 만들기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로 당선된 오오바 구청장은 구민참여를 구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1980년에는 법정 지구계획제도를 창설하였고, 1982년에는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구청 내에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였다. 1983년에는 마을만들기과를 설치하고, 1992년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공익신탁 '마을 만들기 펀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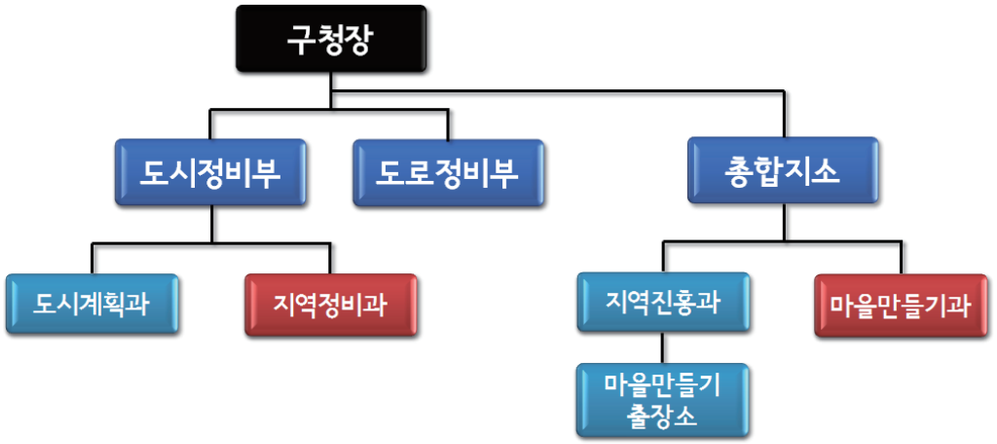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 조직

세타가야구의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은 구청 도시정비부 내 '지역정비과'를 비롯하여 총합지소의 '마을만들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의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재단법인 세타가야구 도시정비공사'에 별도의 '마을 만들기 센터'를 설치하여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연구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자금은 '마을 만들기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지역정비과'는 도쿄도청과의 협의와 조정,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재정을 중심으로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내용에 따라서 도로정비부나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1982년에 설치되었던 기획부 산하 도시디자인실'은 현재 도시정비부 지역정비과와 통합 · 운영되고 있다. 1991년 지역행정제도 도입 이후 세타가야구는 1999년에 구역을 5개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총합지소'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에 구청이 가지고 있던 일부 권한을 총합지소로 이관하였다. 각 총합지소는 지역의 개성화 사업, 지역간담회, 지역회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마을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총합지소 산하 '마을만들기과'는 현장에서 실제로 주민들과 협력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부서로써, 주민행정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구를 9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지구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세타가야구에는 총 20개의 '마을 만들기 출장소'가 있으며, 자치회, 사회복지협의회, 청년지구위원회 등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 조직 〉



또한 세타가야구는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재단법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3]에 '마을 만들기 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 행정 · 기업 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센터의 주요 업무는 주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 활동 지원, 마을 만들기 정보의 수집과 발신, 마을 만들기 기회제공, 참가 · 협동형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마을 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도시기반 정비활동 지원, 마을 만들기 전문가 파견 및 육성지원 등 7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마을 만들기 센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마을 만들기 시작부문에 대한 보조와 마을 만들기 활동보조, 마을 만들기 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보조, 그리고 마을 만들기 교류 보조 등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세타가야구의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는 크게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조례'와 '세타가야 마을 만들기 펀드'를 들 수 있다.

3) 세타가야구는 마을 만들기 초기, 1980년 4월에 시가지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가로용지매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세타가야구 도시정비공사'를 출자하여 설립하였는데, '재단법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재단법인세타가야구 도시정비공사'와 '재단법인 세타가야 트러스트 협회'를 통합하여 2006년 4월 1일에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보조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보 조 금
마을만들기 시작부문	–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경우나 기존에 이미 시작한 활동의 방침이나 기획이 아직 모색상태에 있는 조직의 활동을 보조 –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학습, 견학학습, 활동을 위한 예비조사, 조직만들기 또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이벤트 등	– 신청조직에 대해 한 건당 5만엔까지 보조
마을만들기 활동부문	– 주민조직이 이미 만들어져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를 하고자하는 조직에 대한 보조라는 점이 시작부문의 보조와 차이 – 마을 만들기에 관한 기초조사, 워크샵, 공공시설계획의 제안, 각종 마을가꾸기 사업 등 구체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 등에 지원 – 보조내용은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기자재구입비, 통신비 및 외부강사 초청비 등이 포함	– 원칙적으로 3년까지 보조가능 – 한 건당 5~50만엔 보조
마을만들기 하우스부문	– 마을만들기하우스는 지역에 근거를 두면서 특정 테마에 대한 전문기술이나 경험을 살려 주민의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실천하는 비영리조직 – 이 조직의 설치준비와 운영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서 3년까지 지원 – 활동사례는 주민의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기술적 지원, 계획 만들기와 시설 만들기에 대한 주민참가의 조정, 지역 만들기의 범위를 넓히는 활동, 주민의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전문가, 기업, 행정 등 각 분야의 네트워크 만들기, 환경개선을 추구하는 공익활동의 실시, 인재육성이나 학습회의 실시, 특정 마을 만들기 테마의 보급과 조사연구 활동 등 – 보조내용은 활동에 필요한 실비와 조직유지비용 및 운영비, 전임자를 두기 위한 인건비 등을 보조	– 한 건당 100만 엔을 상한 – 원칙적으로 3년까지 보조가능 – 인건비보조는 마을 만들기하우스 부문에 대해서만 가능
마을만들기 교류부문	–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조직 상호간 정보교환과 네트워크형성의 기회와 장을 만들어 상호교류활동을 보조하는 것 – 활동사례는 자녀들의 놀이방, 노인생활, 상점가의 활성화 등 특정한 영역내 그룹간 교류기회를 만드는 것,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그룹간 교류기회를 만드는 것, 지역내 혹은 지역간 활동그룹의 교류기회를 만드는 것 등 – 정기적인 회합 개최비용, 교류를 통해 활동을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비용, 소식지의 발간비용,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학습이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비용	– 한 건당 100만엔까지 보조 – 원칙적으로 3년까지 보조가능

자료: 김선기 · 이소영(2007).

먼저 세타가야구는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라서 '지구마을 만들기 협의회 경비조성'[4]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며, 재건축 진단과 계획 조성 및 유도사업

4) '지구마을 만들기 협의회 경비조성'은 지구마을 만들기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의 원안작성 및 운영 경비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이며, 2006년을 기준으로 8개 협의회를 지원하였다.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조례'는 1982년 제정되어 1995년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총칙과 마을만들기에 관한 방침 등의 책정, 마을 만들기의 추진, 지원, 잡칙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조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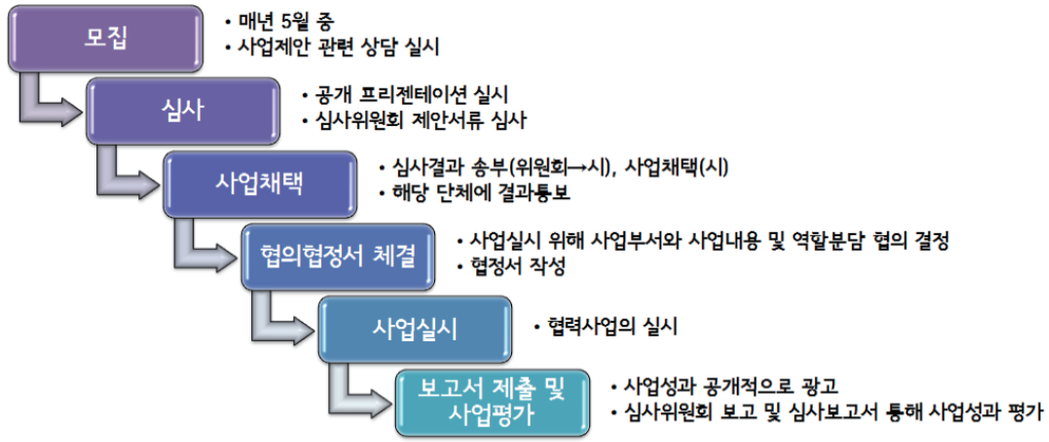
장	절	조
제1장 총칙	–	– 목적, 기본이념, 정의 – 구/구민/사업자의 책무 – 마을만들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조정
제2장 마을만들기에 관한 방침 등 책정	종합기본방침 등의 책정	– 종합기본방침의 책정 – 종합기본방침의 책정절차 – 분야별 정비방침의 책정
	지구마을만들기 계획의 책정	– 지구마을만들기계획/안 작성 – 지구마을만들기계획의 책정절차/열람 – 지구마을만들기계획의 책정/변경 준용
	지구계획 등 안의 작성절차	– 지구계획 등 안 작성절차 – 지구계획 등 원안의 제시방법 – 의견제출방법
제3장 마을만들기의 추진 등	지구마을만들기사업	– 지구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 유도지구	– 마을만들기 유도지구의 지정 – 건축행위 등 유도
	마을만들기 추진지구	– 마을만들기 추진지구의 지정 – 추진지구의 지정기간 – 공공공익시설 등 정비촉진
제4장 마을만들기의 지원	–	– 지구마을만들기협의회 조성 – 마을만들기지원단체 등 조성 – 정보의 제공 등/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
제5장 잡칙	–	– 진척상황의 공표 – 위임

자료: 목정훈 · 박종현(2008).

마을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1992년 조성된 마을 만들기 공익신탁 '세타가야 마을 만들기 펀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공익신탁은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일정 재산을 수탁자인 신탁은행에 예치한 다음 운용수익을 수익성이 높은 주민활동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신탁 '세타가야 마을 만들기 펀드'의 보조 결정은 응모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기금 운영위원회가 공개심사회를 열어 응모안들을 평가한 다음 일정한 심사기준[5] 하에서 보조 여부를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신탁은행에 조언하고, 수탁자인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보조대상자를 결정한다.

〈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사업절차 〉



〈참고문헌〉

김선기 · 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목정훈 · 박종현(2008),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 –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세타가야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9권 제4호.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 –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연구원.

천현숙(2000), 세타가야(世田谷) 마치즈쿠리센터, 국토 제223호.

5) 심사기준은 각 부문의 논점에 입각한 활동, 살기 좋은 환경의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활동, 활동의 실현성, 필요성 등을 적용한다.

빌딩 숲 사이 우리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곳, 성북구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쾌쾌한 매연 속에서도 한국의 빛과 향기를 잃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숨 쉬는 역사가 성북구에 있다. 북한산 자락에 안겨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왕비 무덤인 정릉과 가장 한국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정릉 한옥단지, 선조들의 생활공간을 가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국 가구박물관까지. 펄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진주처럼, 도심의 획일화된 모습을 벗어나 그 안에 귀중한 역사를 품고 있는 성북구로 떠나자.

정릉에 스며든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영화 '건축학개론'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음'이라는 설렘과 첫사랑의 뭉클한 감성을 결부하여 모든 국민이 첫사랑 열풍에 빠져들게 한 핑크빛 감성 영화다. '건축학개론'의 남녀 주인공은 각자 대학 과제를 위해 성북구의 '정릉'을 방문하게 되고 따스한 봄날, 그들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들이 방문했던 정릉은 조선 최초의 왕비, 이성계가 첫눈에 반한 신덕왕후의 능으로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신덕왕후와 이성계 역시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서로에게 첫사랑의 대상이자 삶의 동반자가 된다. 이성계는 신덕왕후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쏟았고 죽은 후에도 왕릉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 때문일지 몰라도 '건축학개론' 속 정릉을 거니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애틋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나무들과 드넓게 펼쳐져 있는 푸른 잔디밭은 그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층 더 고조시켜주고





말없이 걷는 산책로는 더 깊은 대화로 우리를 이끈다. 회색 도심 속 푸른 자연의 색으로 채색된 정릉, 성북구의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드럽게 떨어지는 처마곡선의 아름다움_ 정릉 한옥단지



대한민국의 악동에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싸이, 그 비결은 '싸이' 다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다운,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는 선조들의 지혜와 한민족의 부드러운 성품을 잘 표현한 한옥이 아닐까?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한국적인 인상을 남겨주고 내국민 방문객들에게는 어린 시절 숨바꼭질하던 골목길을 떠올리게 하는 한옥이 있는 곳, 성북구 정릉 한옥단지가 있다. 서울에서 유명한 북촌과 서촌의 한옥마을은 관광객들의 발길로 많이 변화하고 골목길과 한옥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낭만이 사라지고 있지만, 정릉 한옥단지는 비교적 본래 한옥마을의 분위기가 잘 보존되고 있다.



쇠창살과 차가운 시멘트벽 사이사이에 사는 현대인들은 느낄 수 없는 한옥의 다정다감한 모습, 아마 요즘 아이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적인 집일 것이다.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이웃사촌과 일상을 얘기하고 더운 여름이면 넓은 대청마루에서 수박 한 쪽을 크게 한 입 베어 무는 즐거움 말이다. 그리고 한옥의 처마 밑으로는 소박한 나무 창문 네 쪽이 달려 있는데 보고픈 애인을 찾아 늦은 밤 달려왔을 어느 청춘은 안채에서 잠드신 부모님이 듣지 못하도록 이 창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는 정릉 한옥마을. 우리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고향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다.

*피부로 느끼는 전통 생활공간_* 한국 가구박물관



한국 가구박물관은 한국의 전통 목가구와 실내 장식품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한국 전통 주생활과 전통 실내 장식을 한국가구와 함께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성 있게 구성하여 1996년에 개관했다. 불특정 다수의 공간이 아니라 소유자 개인의 특징적인 수집으로 특성을 살린 인간적인 전시 분류방법을 도입하여 관람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매우 크다. 그리고 예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적하고 여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며 큐레이터의 해설이 더해져 전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한국 가구박물관은 주변에 높은 빌딩이 없고 고지대에 위치하여 탁 트인 전망과 맑은 공기를 자랑한다. 하늘이 맑은 날에는 남산까지 보인다고 하니 고층빌딩보다 더 좋은 전망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가구박물관의 차분한 분위기와 고즈넉한 한옥의 풍경은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주고 사물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을의 풍경은 절정을 이룬다고 하니 붐비는 도심을 벗어나 가볍게 산책하듯 방문하기 안성맞춤이겠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지방재정연구실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일 시 / 2013. 7. 19(금) 10: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일 시 / 2013. 7. 22(월)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일 시 / 2013. 7. 22(월)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제3차 KRILA 자치포럼 개최

일 시 / 2013. 7. 30(화) 10: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 연 /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주 제 / 지방3.0의 의미와 추진 전략





제2회「지방자치실천포럼」개최



일　　시 / 2013. 7. 31(수) 7: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조강연 /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3년 7월 31일 수요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 '제2회 지방자치실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이 '지방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3 제2차 한 · 일 공동연구회 개최

일　　시 / 2013. 8. 28(수) 13:30~18: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연구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KRIIA 교육연수 [담당자: 김유숙/ 02-3488-7353]

● **제3기 지역통계활성화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9. 4 ~ 9. 6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연구원

발간물

● **「지방자치 Focus」8월호 발간**

제　　목 /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저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 연구원



● **「행정지식나눔 효자손」제3호, 제4호 발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행정연수원 공동발간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